



#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김진수 | 발행처: 대한민국의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23('23-1) | 2023. 1. 2.

한반도의 역학 관계와 지정학(地政學), <국방혁신 4.0>의 현주소  
김성진

안보환경 변화와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비  
나태중

방위산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함의  
최규상

## 한반도의 역학 관계와 지정학(地政學), <국방혁신 4.0>의 현주소

김 성 진

(한국유권자총연맹 국방정책포럼위원장)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은 국제 정치·경제·군사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을 조장하며, 투발 방식과 수단 등을 진화시키고 있다. 11월 초, 정부에서 2023~2027년도 ‘한국형 3축 체계’ 예산(30.5조 원)을 책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 혁신위원회’를 운영함은 실질적인 변화의 하나다. 정부에서 국익을 추구하는 ‘목적과 방법, 수단’이 국민의 적극적인 신뢰와 응원이 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하 적)의 ‘갓끈 전술’은 매번 상식을 벗어난다. 따라서 도발 형태와 양상도 과거의 진주만 공습(1941), 6·25전쟁(1950), 우크라이나 침공(2022)과는 다를 것이다. 예측하기 힘든 시간에 각종 미사일을 다량으로 발사하고, 사이버 공격 및 특수작전부대를 투입한다. 한국의 국가-군사대응기구의 결심은 지체되고, 극렬분자들은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 美-日의 한반도 개입이 지연되자 中-러는 태평양 주도권을 장악할 호기로 판단하여 미국에 직접 협상을 압박한다. 그러나 한국은 6·25전쟁 시 휴전 협상 과정과 같이 소외될 것이다. 장밋빛 청사진에만 의존할 때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방혁신 4.0’의 성과를 증대하려면, 세 가지 본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먼저, ‘국방혁신 4.0’이 왜! 필요하며, 왜! 해야 하는지! 앞엿것과 차이는 무엇인지! 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의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의 획기적 강화’ 과제는 북한을 안보위협 상수(常數)로 본다. 그렇다고 한반도와 中-日의 군사적 역학 관계를 소홀히 취급하면 안 된다. 2015년 중국은 7대 군구(軍區)를 5대 전구(戰區)로 개편하고 해병대군단을 창설했다. 북부전구엔 북해함대(2개 육전여단)와 랴오닝 항모가 소속되어 있다. 이들은 ‘한반도 급변사태, 러시아와의 국경분쟁 시 베이징을 방어’한다지만, 언제라도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다. 대형 능동형 위상배열 레이더(LPAR, 감시 범위 : 5,000km) 2대가 운용되고, 최근 산둥성에 1대를 추가하였다. 일본은 XASM-3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400km)을 배치하고, 2030년대 중반까지 극초음속 미사일(3,000km)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며, ‘반격능력’을 보유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둘째, 모두가 ‘Yes’라고 할 때 ‘No’라고 하는 ‘Red Team’이 필요하다. 정형화된 틀에서만 진행되는 논쟁은 발전적 변화를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손자병법>의 5사 7계 즉, 내부적으로 역량을 평가하고, 상대국과 비교하여 약한 분야는 더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전략의 핵심은 ‘한국형 3축 체계’다. 그러나 상대를 억제하고 싶어도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승복하지 않기에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① 적의 도발을 사전에 탐지할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조기에 갖춰야 한다.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정예부대(이라크군)가 왜! 패했는지 되짚어야 한다. 따라서 필요할 때 韓·美 연합사의 자산도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적은 고체 핵·미사일 연료를 개발하여 발사 시간(5분)을 앞당겼다. 우리도 발사 시스템(30분)의 개선과 관련 무기체계를 조기에 완비해야 한다.

③ KAMD-KMPR의 각종 오발 사고 및 시스템 작동의 오류 원인이 해소되어야 하며, 물리적·시간적 공백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저-중-고고도 요격 무기체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다. 이를 보강하기 위한 ‘K-아이언돔’을 2026년까지 구축한다. 그러나 고도 10km 이하의 장사정 포탄을 차단하는 대공포(방공망) 체계이기에 ‘3축 체계’의 성격과 다르다. 방어 대상도 전시 국가통제기능과 주요 군사시설, C4I 시설에 한정되어 있다.

④ ‘3축 체계’의 핵심인 KMPR은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다. 더구나 대북한 고가치 표적과 타격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고, 전략사령부 창설은 2023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합참에서 ‘핵·WMD 대응센터’를 ‘핵·WMD 대응본부’로 확대하지만, 특성상 통할(統轄)의 효과성이 떨어지기에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적이 많은 수량의 미사일을 낮은 고도로 발사했을 때 대응 방법과 수단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미국은 2013년 버락 오바마 정부 때 ‘발사의 왼편 작전(Left of Launch-사이버 교란작전) 개념’을 채택하여 3년간 적이 발사하는 미사일의 88%를 실패하게 유도하였다. 한국은 아직 무기체계의 질적·양적 측면과 대응 방법(수단) 측면에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결론적으로 中-日의 군사변혁은 상당한 수준이며, 재래식 무기를 보유했던 이라크군은 미국의 첨단 과학무기에 참패당했다. 한국이 장밋빛 청사진에 안주할 때 적은 ‘핵 무력 법제화’를 공표하며 각종 순항·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을 갖췄다. 오늘의 부족한 계획이 완벽한 내일의 계획보다 낫다. “단검(短劍) 진일보(進一步)-짧은 칼은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를 되새기자.

# 안보환경 변화와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비

나 태 종

(충남대학교 교수연구원)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

자국의 이익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현대 국제관계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쟁점, 그리고 잠재적 위협 또는 당면한 위협들은 지금까지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 무력(군사력)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전통적인 안보 개념에서 벗어난 여러 위협들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는 물론 가까운 장래, 나아가 미래의 국가안보에 있어 위협요소는 무엇이 될 것이며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비태세 구축을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 안보 개념의 확대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주도권 장악을 목적으로 정치·경제·군사 등 제 분야에서 경쟁 차원을 넘어 패권경쟁, 나아가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날로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핵 위협은 한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까지 겨냥하고 있어 언제든지 국제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한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안보란 안전보장을 줄여서 일컫는 말로서 “편안하게 보전된 상태 즉, 근심과 걱정,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와 안전을 누리는 것”, “특정한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많은 경우에 안보를 국가안보와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하고 있다.

냉전시대 국가안보가 전통적 의미의 안보개념으로서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침략, 침탈, 침공, 침입)을 막아내는 협의의 성격이 강하였다면, 탈냉전 이후에는 군사적 위협에 치중하는 비중은 크게 작아진 반면 사회, 경제, 환경, 인권, 감염병 등의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문제가 새로이 안보의 범주에 포함되는 포괄안보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국방의 영역에서도 전통적인 위협은 물론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군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전통적 안보위협이란?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 사건을 계기로 테러가 주요 위협으로 부상하였으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공격, 각종 테러, 기후변화, 대규모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국제난민, 신종 감염병(메르스, 사스, 조류독감,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 열병, 코로나)과

같은 보건과 위생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 및 확산으로 인해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에 대한 구분이 더욱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중 무엇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안보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비전통 안보의 개념 또한 각각의 정치공동체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 문제는 선진국에게는 중요한 비전통적 안보위협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환경오염은 비전통적 안보위협 요인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비전통 안보위협이란 기존의 전통적 군사적 위협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정치공동체가 수호하고자 하는 가치체계에 대한 위협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비전통 안보위협이란 경제안보, 식량안보, 개인안보, 환경안보, 자원안보, 에너지안보, 가치공동체 안보, 건강안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비전통 안보위협은 주체가 국가 뿐만 아니라 개인을 포함하고, 위협의 영역과 수단 또한 비군사적 요소를 모두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으로 초래되는 국가와 개인의 위협을 고려한다면 그 범위가 전통적 위협에 비해 매우 넓고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안보의 개념이 광역화되고, 포괄적으로 확장된다고 하여 군이 전통적 의미의 군사 안보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기존의 국방역량에 더하여 정부 부처와 각종 사회단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 국제적인 정보공유, 협력 및 협업 조직의 활성화, 전문가와 시민사회 조직의 네트워크 형성 및 활용 등 새로운 능력들이 추가로 요구된다.

### 안보환경 변화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군)의 역할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국제정세와 동북아시아 안보정세의 변화, 그리고 북한의 위협의 강도 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계속되고 있는 긴장과 대립의 국면은 여전히 지속되고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군사적으로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군은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로서 사명과 역할 수행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특히, 우리 군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아덴만 여명작전'과 같은 최상의 수준과 결과가 상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국민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최대 다수의 국민이 최고 수준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대비태세를 구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은 위협의 대상이 군사영역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부가하여 민간영역이 포함된 비전통 안보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로마제국의 군사전략가 베제티우스(Flavius Vegetius)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전쟁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키우고 무장을 강화하지 않으면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생존과 평화가 위협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평화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국(적국)보다 군사적인 우위의 확보, 즉, 안보태세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차원에서 적국에 대해 강경한 정책 또는 유화적인 정책을 적용할 경우에도 강력한 힘(국력,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낱 헛된 구호에 그쳐 왔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국가안보를 강화한다는 것은 현재의 급박하고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하여 다가올 미래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외부세력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면서 국리민복을 증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가능성이 있으면 외교·경제·군사력 등 제반 수단을 이용하여 억제하고, 만약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적의 침공을 격퇴시키는 한편, 정부기능을 유지하여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평화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비태세의 유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폐기가 이루어져 핵위협과 전면전쟁의 위협이 완전하게 소멸되고 사이버공격, 테러 등의 비군사적이고 비전통적인 위협의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는 변함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정책기조는 통일한국이 달성된 후에도 전통적 위협과 비전통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비는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한다.

# 방위산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함의

최 규 상

(대전대학교 교수)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

## 성장동력을 상실한 한국경제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수출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하였다. 1970년대 오일쇼크나 1990년대 IMF 사태도 한국이 1인당 GDP 3만 달러를 넘어 세계 11번째 '30-50 club' 국가로 성장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하였다. 한때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이웃 나라 일본은 '2023년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하고 이후 양국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기까지 한다.

1990년대까지 한국은 연평균 10%대의 고속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당시 세계 경제가 호황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의 경제성장은 마치 기적과도 같은 것이다.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한 것은 한국의 수출산업이었으며, 한국 경제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는 수출산업이 한국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이었음을 보여준다. 한국경제의 최악의 위기였던 IMF 사태 때에도 한국의 수출산업은 한국경제를 굳건히 떠받치는 힘이 되었다. 한국의 수출산업은 한국경제가 성장하는 데 연평균 50%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미침으로써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왔다. 1990년대에 들어 성장률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2011년에도 한국의 수출산업은 11.2% 성장을 이룰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던 한국의 수출산업이 2013년에 들어 돌연 3.1% 성장에 그치게 되자 한국경제의 성장률도 3%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2022년 한국은 여전히 세계 제6~7위권의 수출 대국 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수출산업과 경제는 과거처럼 고속성장세를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잠재 성장률 전망치는 2020년대에 2%대에 머물다가 2030년대에는 2%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수출산업의 성장 속도 둔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수출산업은 저임금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여타 선진국 수준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더 이상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2023년 일본의 1인당 GDP가 3만 3,334 달러로 한국의 3만 4,505달러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경제전망을 고려하면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아시아권 최고 수준으로 임금이 반영된 한국 수출산업은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핵심적인 성장동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한국 방위산업

일본의 장기 경제침체는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경제가 일본 경제를 20여 년 정도 후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한국경제도 일본과 같이, 장기 경제침체에 빠질 우려가 크다. 더욱이 수출산업이라는 핵심 성장동력을 상실한 한국경제는 일본보다도 더 극심한 장기 경제침체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많은 경제전문가가 한국의 1인당 GDP는 2025년 4만 달러, 2029년 5만 달러, 2035년 6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수출산업 가격경쟁력이라는 핵심 성장동력을 잃은 한국경제의 성장 전망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은 않다.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新성장동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분단국이라는 국가안보 상황과 자원 빈국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다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상승해 버린 임금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는 줄고 사회는 고령화되어 활용 가능한 노동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상도 한국경제의 성장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미중 간 패권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치 질서의 왜곡이나 미국의 IRA와 같은 보호무역주의의 팽창 등도 수출산업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에는 매우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방위산업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게 한다. 2022.7.27. 폴란드는 한국의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한국산 무기 3종을 대량 구매하는 기본계약을 맺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2022.5.21. 발표된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는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부분에 ‘한미 간 국방산업 분야 협력 잠재력이 증가함을 인식하여 한미상호국방조달협정(RDP) 논의를 개시하고 국방 부분의 공급망과 공동개발, 제조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양국정상이 합의했음’을 밝히고 있다. 2022.11.24. 윤석열 대통령은 경남 사천 KAI에서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관하고 세계 방산시장의 5%를 점유하여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스웨덴 민간 연구기관 SIPRI에서 발표한 ‘국제 무기 거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8위권 방산국으로 세계 방산시장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만일 한국의 방산업이 세계 4위권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방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Defenomics(Defense + Economics)의 측면에서, 한국 방산업의 성장은 외화 획득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과 국부의 창출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며, 한국의 방위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